

## “시민대책위, ‘태안분향소 서울 이동·단식농성 들어갈 것’

고 김용균 투쟁승리 노동자대회·5차 범국민추모제 열어 ... 1월 27일 49재 맞춰 대규모 범국민대회

민주노총이 1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살피고,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부가 강행한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반행위가 자그마치 1,029건이 나왔다”라고 지적하고, “이미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 진단 결과 원청과 하청 구조 아래서 발전소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차원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



회장은 “어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다리에서 전태일을 만났다. 5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라면서 “김용균 동지 어머니가 노동자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어머니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이어 진행한 ‘고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에 참가했다.

“살아 있는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1월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를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1월 19일까지 요

구한 답변에 정부는 ‘노력하겠다’라고 할 뿐,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대표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태안분향소를 서울로 옮겨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평일에 집회를 계속 배치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1월 27일 김용균 동지 49재에 맞춰 6차 범국민대회를 더욱 큰 규모로 열겠다”라고 경고했다.

추모제 연단에 선 김용균 동지 어머니 김미숙 씨는 “죽지 않아도 될 귀한 생명이 하루에 6~7명이 죽고 있다. 살아 있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고” 규탄했다. 김미숙 씨는 “노동자의 권리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앞날은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밝은 미래를 찾는 투쟁에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추모제를 마친 노동자와 시민들은 “우리가 김용균이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노동과 세계>

# 말로는 노동 존중, 행동은 노동 탄압

경찰, 면담 요구한 노동자들 줄소환 조사 ... 노조, “노동자 권리 외면하는 노동부나 처벌”



이재갑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노동관서 접거 관련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 발언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주요 간부 회의에서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우발 폭력 사고를 거론하며 “사업장 내 폭력과 불법 점거에 엄중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노동부 장관 발언이 나오자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 네 명을 구속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심지어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을 법정 구속까지 했다. 함께 근로복지공단 면담에 들어갔던 노조 노동안전보건 간부 열 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

았다. 노조파괴 범죄자 권혁태 대구 지방노동청장 퇴진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대구지역 노동자들과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1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에 퇴거명령을 남발하고, 경찰은 이에 맞춰 소환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 처벌 중단 ▲정당한 투쟁 짓밟는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사업장에서 점거 파업 금지, 노동쟁의 현장 테이저건 도입 등 검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투쟁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얼마 전 수천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삼성테크윈 노무 담당자는 불구속했다. 하지만 부당한 산재 불승인에 항의한 박세민 노안실장은 구속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이 최소한의 법 균형감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과 양경수 경기본부장, 이정호 세종충남본부 조직부장, 김수억 노조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장도 문재인 정부가 소환조사로 정당한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